

41년 만에 폐지됐던 의경...부활하나

정부, 흉악범죄 막기 위해 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 1982년 최초 도입...전경 해체 후 집회·시위도 투입 2017년 文정부 당시 5년간 단계적 감축·폐지 결정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보조 인력인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단계적 폐지가 확정된 의경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5월 의경 마지막 기수(1142기)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련의 범죄나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으로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서 방법수찰대에 가까운 인력으로 4000명 등 대략 7500~8000명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의 발언은 의경 폐지로 치안 수요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 채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길거리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력은 4분의 1정도인 3만명 정도"라며 "지구대, 파출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현

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의경은 1982년 군사정권 시절 시위 등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된 다음해 1기(175명)가 최초 입대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의경은 지난해 폐지되기 전까지 41년간 청사 방호, 교통질서 유지, 범죄 예방 활동 등 치안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013년 전투경찰순경(전경)이 사라진 후에는 집회·시위 대응에도 투입됐다.

한때 만연한 구타 및 가혹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도를 아예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외출·외박 등 군보다 복무 여건이 낫다는 점 때문에 의경은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의경은 소위 '사회 유력인사' 자제들이 편하게 병역을 마칠 수 있는 통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의경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0%씩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당시 2만5911명이었던 의경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 경찰관 7773명을 뽑아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1년 11월 입대한 마지막 기수가 전역할 때까지 총 47만여명의 청년들이 의경을 거쳐 갔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경이었지만, 경찰 안팎에선 폐지 이후 집회·시위 등 현장 대응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하면서 현장 인력은 물론 특공대·장갑차까지 동원됐지만 또다시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 경력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다고 당장 직업 경찰관을 충원하는 것은 시간이나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의경 8000여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치안 보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찰은 병역자일 중 일부를 넘겨받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 중으로,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치안 보조 역할을 하는 의경 부활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급박한 현장에서 의경에게 전문적인 활동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8000명 규모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래도 문제가 계속 터지면 그때마다 규모를 더 늘릴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구례소방, 출동시스템 구축등 모든 준비 완료 본격 업무시작

오는 25일부터 구례소방서가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재난현장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출동시스템 구축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소방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소방,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담양소방서는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금성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순천 남도파출소, 다중밀집지역 합동 순찰

순천경찰서 남도파출소는 지난 20일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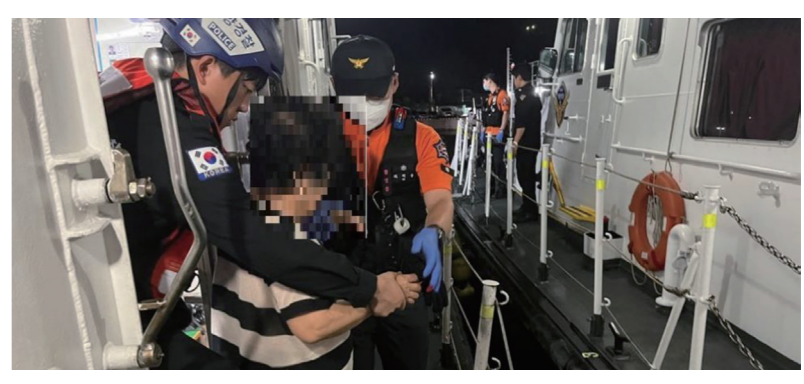
화순경찰, 공원·산책로 특별치안활동 강화

화순경찰서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공원, 등산로, 돌레길 등 특별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여수해경, 해외 해양 치안 공무원들 경찰서 방문

여수해양경찰서는 "개발도상국 등 8개국 9명의 외국 해양 치안 기관 공무원들이 경찰서 등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경비합경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해경, 을지훈련 기간 중 상황대응에 구슬땀 흘려

완도해양경찰서는 국가 위기관리 종합훈련인 을지훈련 기간 중 도서지역 응급환자, 항해장비 고장 선박이 발생하여 긴급출동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신림 칼부림' 조선, 법정서 안절부절...얼굴 감싸고 쥐어뜯고

20~30대 남성 4명 피해...1명 끝내 사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재판 내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체포 당시와는 다르게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갈색 수의를 입은 조씨는 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왔다. 마스크를 눈 근처까지 올려 얼굴을 최대한 가린 모습이였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방청석을 거의 등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려 취재진을 외면했다. 재판 시작 후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하기도 했다.

이날 조씨 측은 일부 절도·사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했다.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분노가 범행동기가 아니라고도 했

다.

조씨는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불안한 듯 한숨을 쉬며 얼굴을 쥐어뜯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인이 상의를 위해 질문을 할 때에만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조씨에게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발할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조씨는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법정을 떠날 무렵에야 고개를 들고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림동 노상에서 체포될 당시 "X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비속어를 써가며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브를 가리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젊은 남성에게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가족관계 붕괴와 사회생활 부적응 등으로 좌절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생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됐다고 봤다. 오유나기자



오염수 방류에 외식·식품업계 한숨

23일 서울 시내 한 횡집 테블릿에 일본산 수산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아들과 배우자 살해 40대 여성, 대법원 판단 받는다

50대 가장을 10대 아들과 함께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는 지난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들인 B(15)군은 1심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나 A씨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A씨와 아들 B군은 지난해 10월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A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9월18일 사업 실패 후 귀가한 C씨와 딸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 9월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잡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A씨와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뒤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둘을 존속살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뉴시스